



코스피 2486.35 (+6.70)	코스닥 822.31 (+9.86)
금리 (연평균) 2.13 (+0.01)	환율 (원/달러) 1064.50 (+3.30) (3일)



[신년기획]
AI가 뺏은 일자리 너머
4차혁명시대
‘희망직종’ 뜬다
03

특수목적대 사라지는데... 5000억 들여 한전공대 설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전공과대학 설립 논란

세무대학·철도대학 등
기능 상실로 통합·폐합
기존 공대생 반발 우려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전공과대학(가칭)’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세무대, 철도대 등 특수목적대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폐교와 통합의 절차를 밟은 만큼, 또 다른 특수목적대 설립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공기업 가운데 하나인 한전이 전문 공과대학을 설립할 경우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기존 이공대 학생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공

대 설립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글로벌 컨설팅 용역이 이달 초 발주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국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40여 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2월 말경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시행할 계획이다.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2월말부터 9월까지 2단계에 걸쳐 용역이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대학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2단계에서는 대학 설립과 캠퍼스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한전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의 타당성과 함께 건축이념, 비전설정, 캠퍼스 콘셉트 등 대학 설립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1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전공대 빅 픽처를 꿈꾼다’란 제목의 포럼

을 열고 한전공대를 에너지 특화 대학 육성, 독립형 캠퍼스 조성, 글로벌 에너지 연구소 설립, 학부와 대학원 동시 개교 등 설립 기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시 포럼에서는 한전공대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전공대 안에 글로벌에너지연구소 등 연구센터 설립, 산·학·연클러스터 조성과 한전 R&D(연구·개발) 등 인프라와 결합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대응의 코어센터로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한전 공대 설립은 현재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총괄·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선 기간 중 광주 시내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현수막에 한전공대 설립 공약이 적혀 있다. /뉴스1

한전 관계자는 당시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는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 공과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력 에너지 분야를 특화하고 학부와 대학원을 동시 개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과 자치단체 안팎에서는 한전 공대 설립 비용을 5000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특수목적대가 시대의 변화의 따라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설립은 시대

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81년 세무공무원 양성을 위해 설립된 세무대학은 교과과정도 일반 전문대학의 세무학과와 비슷한데도 국가예산으로 교육비를 부담하고, 졸업생들을 세무공무원으로 자동 임용시키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01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뒤 폐교됐다.

한국철도대학의 경우도 기능이 약화되면서 2011년 9월 26일 충주

대학교와의 통합이 승인돼 2012년 3월 1일부터 한국교통대학교로 변경됐다.

지난해에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경찰대 출신과 일반대 출신과의 차별 문제를 놓고 ‘경찰대 폐지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존 공대의 반발도 우려된다. 한전공대 출신들이 한전을 비롯해 산·학·연 클러스터나 연구센터 등에 대거 포진할 경우 기존 공대생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은 전남·광주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정부 공약으로, 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현 단계에서 기능 약화 우려 등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대학의 기능도 에너지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일반종합대학 내 공과대학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LNG(액화천연가스) 쇄빙선을 시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옥포 대우조선 방문

“일감 확보에 모든 지원... 조선강국 도약 확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1분기 중 혁신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를 대비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1·4분기 중에 마련하겠다”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북극항로에 취항하는 쇄빙 LNG(액화천연가스)선박 건조현장을 둘러본 뒤 “친환경, 자율운항 기술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기자재 실증, 자율운항 핵심 기술과 선박개발을 지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거제는 문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새해 첫 외부 행사지로 조선업 현장을 택한 것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추

진 중인 한국 조선업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특히 건조를 마치고 4일 출항을 앞둔 쇄빙 LNG선을 직접 둘러본 것은 ‘무술년’ 새해를 맞아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 얼음을 깨고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하자는 의지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LNG연료선을 중심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면서 “쇄빙연구선, 밀수감시선 등 공공선박의 발주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9억불 규모의 선박발주 프로그램, 노후선박 교체 지원 보조금을 통해 민간 선사의 LNG연료선 발주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탈석탄·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조성될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도 해양플랜트 수요 창출로

조선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은 2~3년 후부터는 조선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환경, 연비 등 해운규제의 강화로 우리가 강점이 있는 LNG 연료선과 LNG 운반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때 세계 1위를 기록했던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 자신감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 조선산업은 수출 감소로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 산업의 저력을 믿는다”면서 “우리 기술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쇄빙 LNG운반선이 이를 입증하고, 힘든 시기만 잘 이

겨낸다면 다시 조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둘러본 ‘Yamal 5호’는 세계 최초의 쇄빙 LNG운반선이다. 최대 2.1m의 얼음을 깨고, 영하 52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장비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이 배는 4일 출항해 오는 2월16일부터 약 1개월간 쇄빙 시험을 거쳐 상업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당시 15척의 Yamal LNG 수송용 쇄빙 LNG운반선을 수주한 바 있다. 수주액만 총 48억 달러 어치다. 지난해 3월 당시 1호선을 인도한 후 현재 15척 가운데 4척이 인도됐다.

/김승호 기자 bada@

효성, 지주사 전환

섬유·중공업 등 4개사 분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효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효성은 3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을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효성은 지주회사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의 사업회사로 나뉘게 된다.

지주회사 ㈜효성은 자회사 지분관리와 투자를 담당하며 사업 부문에 따라 효성티앤씨(섬유·무역 부문, 효성중공업(중공업과 건설 부문, 효성첨단소재(산업자재 부문, 효성화학(화학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국내외 계열사는 신설회사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계열사 주식은 해당 신설회사로 승계하고 나머지는 ㈜효성에 존속된다.

효성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T&C, 효성물산, 효성생활산업, 효성중공업 등 주력4사를 합병한 이후 섬유, 산업자재, 중공업 부문 등 각 사업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주사 전환이 추진된 것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이 올 초 효성그룹 회장에 취임해 3세 경영체제가 구축되면서다. 지난해 7월 조석래 회장이 ㈜효성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조현준 회장이 대표이사직까지 맡으며 가시화됐다. 또한 지난해 초



조현준 효성 회장. /효성그룹

부터 오너 일가가 효성 지분을 꾸준히 매입한 것도 이를 위한 조치였다.

효성의 지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조석래 명예회장 357만 5758주, 조현준 회장 501만939주, 조현상 사장 428만7020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보유 지분은 효성 총 지분의 36.665%에 달한다. 자사주 184만8851주가 인적분할로 연결권이 부활되면 오너 일가가 행사할 수 있는 지주사 지분율은 40%를 넘게 된다.

㈜효성은 이번 분할로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설된 분할회사들도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며 적절한 기업가치 평가도 가능해져 주주 가치가 제고되고 사업부문별 전문성과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돼 경영효율도 높아질 것이라 계산이다.

㈜효성은 오는 4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분할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주주총회에서 가결될 경우 회사 분할은 6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오세성 기자 sesung@